

종합·해설

‘회사 손해 끼친 위법행위’ 재확인

■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유죄 의미·전망

“가격 문제 있었다”...李회장 공모여부는 판단 유보 이재용씨 지분 ‘도덕성 논란’...지배구조 영향 받을듯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씨에게 넘겨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위법행위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유죄 인정 취지와 의미=항소심의 판결은 크게 ‘CB 저가 발행이 회사에 손해인지, 즉 이사들이 배임을 했는지’와 ‘손해액은 얼마인지’, ‘CB 발행이 에버랜드 지배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한 공모나 계획 하에 진행했는지’ 등 세 가지였다.

■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정점과 판단

Table with 3 columns: 쟁점, 삼성측 주장, 항소심 재판부 판단. Content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rland CB case, such as the amount of shares issued and the court's findings on the board's actions.

로 삼성 지배구조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재용씨는 1995년 이후 비상장 계열사 지분 취득·비상장자세를 상장사후 후 지분을 매각해 마련한 ‘종자돈’으로 에버랜드·삼성전자 등 핵심회사 지분 인수 →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등록 등 계열사 지배력 확대 순으로 그중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사용됐다. 이재용씨는 이견도 회장으로부터 1995년 60억원을 증여받아 세금을 내고 남은 44억으로 에스원 등 비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상장시킨 후 처분해 지분을 560억원으로 ‘뿔뿔히’한 뒤 에버랜드 지분을 약 100억원에, 삼성전자 지분을 약 450억원에 취득했다.



무거운 발걸음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하 에버랜드 전 사장(앞)과 박노순 현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선고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맞다”

진실화해회 “정수장학회가 부인 안하면 국가가 배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강제 헌납된 것이 맞다고 진실규명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가가 김지태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는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언론사 주식을 정수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돼온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일장학회는=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법원장까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의 제작이다. 삼화호 사건인 부산 기업인 김지태씨가 1958년 설립한 장학회로 5·16 쿠데타 이듬해인1962년 김씨가 구속된 뒤 국가에 헌납됐다. 이후 1982년 박정희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자씩 따 정수(正)장학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지난 2000년 김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로 운영된 포기각사에 서명했기 때문에 갈담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이견도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남매에게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할값에 넘겼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의 3차 전이 29일 항소심 판결과 함께 사실상 다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CB 가격이 높았다면 회사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을 것이므로 할값과 적정 가격의 차액만큼 손해이며, CB 가격 7천 700원도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CB 저가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고, CB 가격 상향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의미가 있다.

CB 배정된 지 11년, 사건고발 7년만에 최종심 에버랜드 변호 경력 대법원장은 참여 못할 듯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의 지배구조와 후계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일관된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측을 변호하면서 끌려온 ‘전환사채’ 저가 발행은 회사의 손실로 볼 수 없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내내 정점으로 부각됐다.

항후 대법원 심리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이뤄지면 이 대법원장의 심리 참여는 원칙적으로 봉쇄된다. 설령 유·무죄에 대한 재판관 4인의 판단이 엇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이 사건 당사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재판에서 배제(제척)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공정성 차원에서 당연히 재판 참여를 ‘회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Large public notice for land compensation and plan disclosure in the Joint Innovation City Development Project in Gwangju and Jeonnam. It includes sections for 'Plan Site Details' (편인지지 내역), 'Compensation Method' (보상방법 및 절차), and 'Landowner Information' (토지소유자). The notice details compensation standards for various types of land and provides a list of landowners and their respective plots.